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탁 계 석

정치와 예술은 거리가 필요하다

10·26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민운동가의 승리로 끝났다. 박 시장은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승리라고 답했다. 재보선은 끝났다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향해 무한질주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실체가 뚜렷이 무엇인지는 입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경제가 잘 돌아가 사람 살기가 좀 편했으면 하는 요구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몇 번에 걸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권력 장악을 해오면서 진저리치는 이전투구의 싸움을 펼쳐 온 만큼 이제는 투쟁보다는 설득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치에 혐오감을 주고, 각자의 세 규합만으로는 어느 쪽도 큰 승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기존의 식상한 정당(政堂)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신당론(新黨論)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과학기술대학원장 같은 인물을 찾기 위해 당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큰 고민에 빠진 것이다.

박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측근을 가까이 둔 것도 포용의 리더십을 통해 더욱 강력한 변화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하려는 뜻일 것이다. 여기서 정치와 예술의 나쁜 관행도 이번 기회에 좀 고쳤으면 한다.

사실 MB 정부 들어 최장수 문화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이 예술에 정치 색깔은 맞지 않다고 옷을 벗긴 사례가 몇가지 있지 않았는가. 말은 옳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코드인사 역풍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옷을 함께 벗어야 한다는 관행이 이제 예술계 전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문화계는 나름대로 굳건한 질서와 전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 석자도 생소한 인물이 정치권력을 업고 등장하면 예술가들은 아연실색이다. 이들이 훈장이라도 단 듯 종횡무진하면 예술가들은 허탈감에 빠져 창조력이 감퇴하고 숨고 싶을 것이다.

박수 받을 사람은 떠나고 인적 네트워크가 빈약한 실습 수준의 인물이 나타나 다시 시동을 켠다면 이는 변화가 아니라 후퇴요, 잘못하면 침몰이다. 예술은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에도 시민을 위로해주고 믿음을 주어야 한다.

재정(財政) 러시아나 세계 2차 대전 중에도 오페라하우스 불을 훤하게 밝힌 것은 사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달래기 위한 '기도'였음을 알아야 한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시인이 고통받는 사회는 병든 사회라 했다. 그런데 정치가 뺨치게 알량한 예술가들이 정치권의 허리띠를 붙들고 동행하면 예술은 죽고 만다. 지금 KBS 교향악단 지휘자 문제가 내홍(內訌)에 빠졌다.

애시 당초 환영할만한 실력 검증의 인사였는지, 들리는 소문대로 정치권 낙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갈등이 장기화되면 국민 혈세는 물론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오케스트라는 돈이 있다고 만들고 당명(黨名) 바꾸듯 갈아 엎는 정치의 희생물이 아니다. 전신인 국립교향악단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만들겠다고 정치권이 손대어 KBS교향악단으로 바꾸었는데, 다시 정치가 가세해 무덤을 판다면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

탁월한 예술경영으로 꽃이 피는가 싶었던 고양아람누리극장, 성남아트센터, 창원성산아트홀, 대구수성아트피아 등 높은 평가를 받던 극장장들이 코드에 걸려 입장을 달리하면서 노하우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예술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도 서울시 문화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니 예술을 사치로 보는 것일까. 최고의 복지가 정신복지인데, 포퓰리즘의 민생복지에 밀려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지.

가난한 아이들, 총으로 무장된 폭력의 아이들에게 악기를 손에 들게 해 도시 전체를 변하게 한 엘시테마 운동이 상륙한 것은 MB 예술정책의 큰 성과인데, 이런 것이 뒤집힌다면 노하우를 잃는 안타까움이다.

정치와 예술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때론 예술가들도 목소리 내야 하지 않겠는가. '침묵은 동조'라는 말이 싫다면….

〈한국예술비평가협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대책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가 부정해 왔던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전남 2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5개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침출수 유출에 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환경부가 4700여 매몰지 가운데 분기당 300곳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3분기 기준으로 105곳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셈이다. 전남지역 침출수 유출지는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 수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던 나주시 봉황면 옥곡리와 신동리 등 2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2곳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상태다.

침출수 유출은 2차 오염을 부른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불러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매몰지 주변 7000여 곳에 대한 환경부의 2분기 지하수 검사에서 3분의 1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복원이 쉽지 않다. 국민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일 뿐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축산폐수 유입 등이 침출수 유출로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매몰지 모니터링 관련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다'를 '확실하다'로 과장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또 올 4분기 조사까지 완료한 뒤 내년 2, 3월께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침출수 대책이 늦어지면 2차 오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환경영향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된 만큼 유출지역을 공개하고, 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 유치원 불법 방치 직무유기 아닌가

광주시내 사립유치원 33곳이 무려 3년 동안 원장이 공석인 채로 운영해 왔다고 한다. 이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의 경우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둬야 하며, 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규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립유치원은 133곳으로, 이 가운데 원장이 공석인 유치원이 33곳에 달한다. 유치원 10곳 중 2곳 꼴로 원장이 공석인 셈이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시교육청은 유아교육계가 그동안 원장 공석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지도·감독에 나서 불법 실태를 적발했다고 한다. 위법 행위를 한 유치원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한 교육청의 책임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유치원은 그 탈법 수법이 극히 치졸해 과연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유치원 설립 후 원장이 3년 이상 공석일 경우 시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유치원 설립자 등에게 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줘왔던 점을 노려 원장을 임의로 해촉하거나 원장이 그만둘 경우 공석으로 방치한 것이다.

문제는 설립자가 3년 동안이나 불법 운영을 해왔지만 감독청이 자의든, 타의에 의하든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치원 원장은 원무 총괄과 교직원의 지도·감독 등 일반 학교의 교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석을 악용해 자격연수를 받았다고 자격과 자질이 있는 것은 아니질 않는가.

탈법을 이용한 자격은 원인 무효로 철회되야 하며, 감독기관 역시 직무유기임을 통감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부실을 초래해온 해당 유치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되,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미래를 위한 의료정책

허 정

우리나라는 지난 60~70년대에 세계 최빈국 상태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이르렀다. 1인당 국민소득도 약 80달러에서 현재 2만 달러가 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자랑스러우며 현재 우리나라 유사 이래 가장 풍요로우면서도 발전된 사회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다.

현 50대 이상의 세대는 배고픔과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도 치료할 의료시설도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다.

이런 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평균수명이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1977년 국민 1인당 GDP가 1천달러정도인 시대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행해 모든 국민이 쉽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현주소는 암울하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의료원가의 채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해 현재도 적정수가의 70%정도 밖에 보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계는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매진해 왔다.

2000년대 들어 우리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시행은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국가적인 큰 재앙이 우려된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정책시행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다.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건강보험재정의 엄청난 적자가 심화돼 국민의 의료비에 대한 큰 부담을 촉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으로 저 부담, 저 수가, 저 급여 정책을 30년 이상 지속시킴으로서 현재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원가의 75%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병원의 도산률이 9.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 해 만해도 148개 병원이 폐업했고, 423곳의 의료기관이 금융권 부채를 갚지 못해 공단에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압류당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와 인건비는 각각 38%, 82% 오른 반면 건강보험 수가는 고작 19% 인상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의 절반, 인건비 상승률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계속적인 증가만 우려한 나머지 의료기관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저수가 일변도로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의 특성상 최신 의료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 고급 인력 양성 등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무조건적인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정책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이제 적정진료, 적정 수가, 적정 부담이라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 의료가 국민의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켜 싱가폴, 인도와 같이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화로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에덴병원장〉

기 고

홋카이도 여행의 단상

이 영 기

요즈음 명절 같은 연휴나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는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동북부에서 일어난 원전 사고로 인해 일본 본토로의 여행은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되게 홋카이도로의 여행은 이어지고 있다. 본토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전하다는 말이 사실인지 많은 여행자가 의심을 가질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가 방사는 안전 수치를 속이는 등의 신뢰가 가지 않는 행위를 하였기에 더욱 의심스럽겠지만, 이는 사실이다.

일본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이후, 홋카이도에서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였는데, 공식 발표 결과를 보면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으며, 본토보다 훨씬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였다. 심지어 서울보다도 낮은 방사능 수치를 보인 지역도 있었다. 이처럼 홋카이도는 방사능의 안전지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은 지진 왕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지진이 많지만, 홋카이도에는 이번 동북부 지진처럼 큰 지진의 전례가 없다. 고로 지진에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홋카이도로 입성하는 방법은 배, 항공기 등이 있으나 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직항이 없으므로 주로 항공기를 이용하게 된다. 최근 이스타 항공, 진에어 등 저가항공사들이 새롭게 취항하여 20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홋카이도에 입성하면 구석구석까지 잘 짜여있는 철도망을 이용하여 홋카이도 전 지역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다. 특히 'JR 패스'를 이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홋카이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다. JR패스란 외국인들만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정해진 기간 동안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다. JR패스에도 3일 권, 5일 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용한 패스를 골라야 할 것이다.

홋카이도에 도착하면 이제 다양한 즐거움을 누려보자. 크게 혀의 즐거움, 눈의 즐거움, 몸의 즐거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홋카이도에는 홋카이도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특산물들이 많다. 사면이 바다인 섬나라이고, 내륙 쪽은 넓은 초원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 덕에 바다에서 잡히는 다양한 해산물들과 초원에서 키우는 저조에서 채취한 우유로 만든 유제품이 매우 유명하다. 즉석에서 떠서 제공하는 신선한 회와 초밥, 갓 짜낸 우유와 그 우유로 만든 치즈와 버터 등의 유제품은 일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신선한 경험이다. 이 외에도 삿포로 특산물인 미소라멘, 스프카레, 징기스칸 등이 당신의 혀를 사로잡을 것이다.

겨울이 되면 홋카이도에는 많은 눈이 내린다. 이 눈을 이용하여 삿포로에서는 2월 초 거대한 축제를 여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삿포로 눈 축제이다. 이 축제는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위로하기 위해 1950년부터 시작한 역사적인 축제로, 일본 최대의 축제이다. 축제 기간에는 눈으로 조각된 세계적인 건축물이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도시 곳곳에 전시되어 관광객들을 끌어 모은다. 이 외에도 '무한도전'에 방영되어 알려진 아바시리의 유빙축제, 구시로에 잇는 일본에서 가장 큰 습지인 구시로 습원 등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또한, 홋카이도에는 다양한 온천이 있어서 몸의 피로를 녹이고, 안식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온천으로 하코다테(函館)에 있는 '유노카와(湯の川)온천', 노보리베츠(登別)에 있는 '노보리베츠 온천'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노보리베츠 온천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으로, 총 11가지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이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어, 연간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따뜻한 노천온천에 몸을 담그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의 슬로프 길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일본의 스키장 또한 한국의 스키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혹 여행을 떠나려는데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특별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홋카이도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매력적인 풍경과 산해진미 그리고 당신을 따사로이 안아줄 온천과 꿈같은 설원이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전남대 학생〉

無 等 鼓

버핏稅

1970·80년대 '코트의 전설'로 회자되는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 그는 전성기 시절 고국 스웨덴의 소득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반발, 세금이 적은 모나코로 거주지를 옮겼다. 그리고 그는 선수생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자 고국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최근 '부자 정당'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한나라당의 쇄신파 의원들이 '한국판 버핏세(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버핏세는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는 일종의 부자 증세 방안이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버핏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슈퍼 부자를 감싸지 말라"며 "나 같은 슈퍼 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혀 전 세계에 공평 과세 논쟁을 촉발시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라는 복병을 만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연간 100만 달러(1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사실상의 버핏세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미 공화당은 현재 세율만으로도 충분히 높을 뿐 아니라 버핏세가 빈부갈등을 자극해 분열을 조장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 저널리스트 찰스 윌런은 "세율이 너무 높아지면 개인과 기업은 지하경제로 숨어 든다"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부자감세는 형평성이나 재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부유층들도 '월가시위' 등 신자유주의 붕괴의 시점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한 사회적 책무에 더욱 고민해야만 이러한 버핏세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차장 lion@kwangju.co.kr

입사 면접 때 여성에 불리한 결혼 질문 안했으면

얼마 전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회사를 사직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최근에 몇 군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던 중 생각잖은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면접을 보러가면 면접관들이 입사지원자들에게 "결혼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이다. 결혼적령기의 남녀들이 결혼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는 비단 명절 때만은 아니다. 취직을 위해 입사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면접관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에 대해서 꼭 질문을 했다.

남성 구직자에게는 '아직 결혼을 왜 하지 않았느냐, 애인은 있느냐?'라고 물어 보고 여성 구직자에게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일을 계속 할거냐, 남편이나 시댁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아기는 언제쯤 낳을 계획이냐?'라는 등의 질문이 그것이다.

물론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회사를 위해 일할 가장 적임자를 채용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결혼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자가 가정이 있는 기혼자보다 아무래도 절박함과 책임감이 떨어져 회사를 쉽게 옮길 가능성이 크고, 회사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여성은 결혼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둘 가능성이 크거나, 혹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직장 일을 게을리 할거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을 다른 각도로 보면 가정과 육아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양의 책임은 남성에게만 있다는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결혼 여부를 놓고 여성에 대해서는 점수를 깎을만한 요인들의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 같아 무척 불쾌하다. 이런 면접은 이제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선화·광주시 서구 마륵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